

기획세미나 논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SNS: 그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Roles of SN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윤 영 민(Young-Min Yun)*

ABSTRAC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SNS emerges as a solid channel for political communications in South Korea. This paper addresses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Twitter. It is empirically explored whether the SNS paves the road to participatory democracy or it invites mobocracy. Korean experiences in the election indicate that it could go either way. Twitter enlarged chances for citizens to express themselves publicly, amplified voices of minorities, and enabled alternative political groups to spring up quickly. In contrast, it twisted electoral agenda and reinforced influence of celebrities. It is the major finding that Twitter was politically carnivalesque rather than public sphere.

Key words: the 19th general election, SNS, Twitter, democracy, public sphere, carnivalesque, politics, election, voting

1. 시작하면서

19대 총선이 끝나자 적지 않은 정치평론가들은 ‘SNS의 패배’, ‘올드미디어의 승리’, ‘공영방송의 부재가 컸다’ 등등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승리도 패배도 대중매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이다. 선거에 있어 대중매체의 영향이 지대하기는 하지만, 만약 매체 전략과 전술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이고 새로운 국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이 바로 대중매체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훌륭한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재신임의 기회이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의 기회이다. 또한 선거는 새로운 비전과 프로그램을 지닌, 그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정보사회학과 교수

리고 더 나은 능력을 지닌 정당과 정치인이 권력을 얻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거 과정이 효율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매체는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과정을 보완하거나 감시하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당의 후보 선정이나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 선정에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는 더욱 매체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 때 학술적 성찰을 시도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대 총선에서 인터넷 매체,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수행한 역할을 민주적 과정(democratic process)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19대 총선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연구 문제에 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① SNS가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가?
- ② SNS가 선거에서 대안적 정치세력이 등장할 기회를 확대하는가?
- ③ SNS가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의제 설정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 ④ SNS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쟁점에 관한 공적 토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가?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자원

1) 정치 참여의 확대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 투표참여율의 경향적 감소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윤영민, 2005). 과연 SNS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투표율 저하라는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치 참여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인터넷과 미국인의 생활’에 관한 퓨 프로젝트의 보고서(Smith, et al., 2009)에 의하면, 블로그와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정치적 목적의 접촉, 청원서명, 기부, 게시-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나이에 따른 차이가 크다. 즉, 그 유형의 정치활동에는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 보고서의 저자들은 블로그나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정치 참여의 패턴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관여와 투표를 직접 분석한 모스버거, 톨버트, 맥닐(Mossberger, Tolbert, and McNeal, 2008)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에 관해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그들은 미국에서 온라인 정치적 뉴스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치적 지식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토론 참여를 확대하며, 정치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적 채팅에 참여하거나 선거후보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 사용으로 정치적 관심, 즉, 동기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뉴스는 오프라인 대중매체보다 훨씬 다양하고 이념적이어서 사용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손쉽게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정치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결과를 인터넷을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온라인 뉴스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견과 결합하여 인터넷 사용이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윤성이(2009)는 투표와 같은 제도적인 정치 참여는 감소하거나 잘해야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비정치적인 사회 집단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참여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해지는 등,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에서 청소년과 주부와 같은 비정치적 집단이 인터넷상의 비정치적 성격의 동호회를 매개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경미(2005)는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의 참여에 인터넷이 독립변수 혹은 매개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였다. 즉,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촛불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전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 온라인상으로 '여중생 사망 사건'에 관한 정보를 받아본 사람들,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여를 권유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여중생 사망 사건'에 관한 온라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 촛불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발견이다.

선행 연구의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SNS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나 관여(involverment)를 제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투표 참여로 귀결될지는 미지수이다.

2) 대안적 정치 세력의 형성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집단들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SNS가 정치적 결사를 쉽게 해준다면 이는 민주적 과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론가들은 인터넷이 집단행동을 쉽게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소프트웨어(social software)'라는 용어를 고안한 셔키(Shirky, 2008; 2010)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가 대화를 넘어 협력과 집단행동을 꽃 피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소셜 미디어가 집단행동에 필요한 조정

비용(혹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을 통한 제도적인 조정(coordination) 없이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hirky, 2008).

최근의 저서에서 셔키(Shirky, 2010)는 집단행동에 대해 더욱 과감한 주장을 제시한다. 그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 덕분에 사람들은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에 낭비되던 시간과 재능을 이타적이거나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지향적 동기가 쉽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또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소셜 미디어 덕분에 참여자 개인은 아주 적은 자원만 투입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역설한다.

만약 셔키의 이론을 정치세력화에 적용해 본다면, 크고 작은 정치적 집단들이 크게 변성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양당 정치의 제도와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 제도권에 진출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정치권이 더욱 개방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의제 설정의 개방

대중 매체가 정치적 의제 설정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중매체가 정치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수 있음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지배적인 대중매체가 특정 정치집단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만약 소셜미디어와 SNS의 발달이 의제 설정 주체를 확대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중대한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의제 설정 이론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는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중으로 하여금 그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게 한다(McCombs & Shaw 1977). 나아가 매스 미디어는 선거 때에 특정한 쟁점을 강조하고 그 쟁점을 바라보는 논리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특정한 근거, 특정한 틀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Iyengar, 2005).

SNS의 등장이 매스 미디어의 강력한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점화(priming), 그리고 틀짓기(framing)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다. 인터넷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 쌍방향성 덕분에 인터넷 사용자, 웹사이트, 인터넷 미디어 등이 매스 미디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구교태, 2002; 김학수, 오연호, 2003; 윤태일, 심재철, 2003; 김성태, 이영환, 2006).

그러나, 선거에서 SNS가 지배적 매스 미디어의 의제 설정으로부터 유권자를 얼마

나 자유롭게 해 줄 있는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SNS에서의 담론이 지배적 매스 미디어의 의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대안적 의제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 조희정·이상돈(2011)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 의한 일상적인 의제 설정이 구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의제 설정까지 가능할 지는 확실치 않다.

4) 정치 토론의 강화

벤클러(Benkler, 2006)는 인터넷이 정보생산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줌으로써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던 환경과 달리 ‘네트워크 정보경제(networked information economy)’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발언자(speaker)’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혹은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생산비용의 획기적 감소로 인해 지역적, 전국적, 심지어 국제적으로 정치적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 블로그 등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네트워크 공론장(networked public sphere)’이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길(2008)은 정치 참여에 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정부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사가 운영하는 690개의 온라인 토론공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공론장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 가는 공론장이기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이 분출되는 공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언론사의 토론방에는 인신공격이나 말싸움이 난무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 즉, ‘집단 양극화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이항우(2005)는 온라인 토론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해석을 내린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토론게시판에 벌어진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담론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하며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총선 시기에 <미디어 다음>에 개설된 ‘총선 핫이슈 토론광장’에의 참여를 분석한 김은미·이준웅(2004)의 실증적 연구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들은 토론 참여자들이 대체로 예의바르며,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SNS에서의 온라인 토론도 긍정적인 모습일까? 매체의 성격에 따라 토론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단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3. 19대 총선의 주요한 현상과 미디어

1) 정치 참여의 확대: 투표율의 제한적 증가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투표율이었다. 투표 당일까지 투표 독려나 인증샷 게시가 허용되자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SNS에 투표를 권유하는 인증샷을 올렸다(디지털 타임스, 2012/4/12). 아마도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민간인에 의한 투표 독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SNS는 투표 권유의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이 되었다.

<표 1> 제17대 총선에서 제19대 총선까지의 주요 선거 투표율

시도명	제17대 총선	제4회 지방선거	제17대 대선	제18대 총선	제5회 지방선거	제19대 총선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
합계	60.6	51.6	63	46.1	54.5	54.3
서울특별시	62.2	49.8	62.9	45.8	53.9	55.5
부산광역시	61.9	48.5	62.1	42.9	49.5	54.6
대구광역시	59.3	48.5	66.8	45.1	45.9	52.3
인천광역시	57.4	44.3	60.3	42.5	50.9	51.4
광주광역시	60.2	46.3	64.3	42.4	49.8	52.7
대전광역시	58.9	49.4	61.9	45.3	52.9	54.3
울산광역시	62	52.8	64.6	45.8	55.1	56.1
경기도	59.7	46.7	61.2	43.7	51.8	52.6
강원도	59.7	58.7	62.6	51.5	62.3	55.8
충청북도	58.2	54.7	61.3	49.3	58.8	54.6
충청남도	56	55.8	60.3	48.2	56.5	52.4
전라북도	61.2	57.9	67.2	47.5	59.3	53.6
전라남도	63.4	64.3	64.7	50	64.3	56.8
경상북도	61.5	61.5	68.5	53.1	59.4	56
경상남도	62.3	57.8	64.1	48.3	61.8	57.2
제주도	61.1	67.3	60.9	53.5	65.1	54.5
세종시						59.2

주)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러나 SNS, 특히 트위터에서의 뜨거운 투표 권유 분위기를 고려할 때 투표율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54.3%로, 이례적으로 낮았던 18대 총선의 46.1%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지만, 17대 총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에도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투표율에서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투표율이 모두 증가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투표율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SNS 사용인구가 수도권 지역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의 투표증가율은 그 일부를 SNS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 이외의 광역시에서도 모두 투표율이 증가한 현상을 SNS의 영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¹⁾

하지만 18대 총선에 비해 19대 총선에서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28.1%에서 45.0%로 무려 17%나 증가하였으며, 30대도 35.5%에서 41.8%로 6% 가량 증가하였다(경향신문, 2012/4/12). 특히 서울에서 20대 투표율은 64.1%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30대의 투표율도 44.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경향신문, 2012/4/12). 이 결과로 볼 때 SNS, 특히 트위터가 적어도 서울의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일정 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SNS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시간대별 투표율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로 오전 일찍은 노인층 유권자들이, 오후에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 당일 오전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자 SNS에는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다(디지털 타임스, 2012/4/12). 그러나 그러한 투표권유 캠페인이 얼마나 투표율을 끌어올렸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오후에는 투표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시간 당 평균 6% 포인트씩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평균 4% 포인트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증가속도는 제18대 총선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제5회 지방선거와 거의 동일하며, 17대 총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SNS의 기여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SNS가 투표율 향상에 기여했을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 하나는 만약 SNS를 통한 정치적 관심 제고 기회와 투표 권유마저 없었다면 투표율이 훨씬 낮았으리라는 것이다. 소극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쟁점과 대안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했던 여야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비록 SNS를 통한 정치적 대화가 감정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연예인, 명사, 정치인 등의 정치적 관심 유도과 투표 권유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만약 그러한 SNS를 통한 그러한 분위기마저 없었다면 선거에서 젊은 층의 참여는 더욱 낮았을 것이다.

1)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NS 사용자 분포는 지역별로 서울 30.0%, 경기 24.8%, 부산 7.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8.2%, 30대 27.8%이다(한국경제, 2011/12/31).

<그림 1> 19대 총선 시간대별 투표율 변화



자료 출처: 오마이뉴스(2012/4/11)에서 전재

다른 하나는 SNS 사용자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은 SNS를 통한 실시간 투표 독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선거 당일 오후 트위터에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투표 인증샷과 투표 권유 트윗이 올라왔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유명 인사나 친구들의 투표 인증샷을 보면서 투표 독려를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그 결과가 투표율 변화에 뚜렷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에 관한 상세한 통계 자료를 공표하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적 정치 세력의 형성: 친노 세력의 부활

대의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가 다양해야 한다. 이념이나 인물의 스펙트럼이 넓을 때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의견이나 희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기존 정당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총선은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지난 단 몇 개월 사이에 여당과 야당 모두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세력이 쇠퇴하고 박근혜 세력이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통합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이하 친노 세력)이 당의 지배적 위치로 올라섰다.

친노 세력의 재등장을 살펴보자. 민주통합당의 경우 중진들이 밀려나고 친노 세력이 당의 중심을 차지했다. 또한 국민참여당과 합당으로 민주노동당도 친노 세력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선거 전에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대표 야당인 민주당이 선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었다. 그런데 뚜렷한 지배적인 세력이 없던 민주당에 친노 세력은 단기간 내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야권연대’라는 전략과, 고 노무현 대통령(혹은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탈권위주의적 스타일의 정치)에 대한 집단적 향수가 호소력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노 세력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가장 잘 사용하는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한 후 친노 진영은 정치적으로 거의 ‘폐족’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친노 세력은 2009년 9월 노무현 재단을 설립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²⁾ 그후 2010년 1월에는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을 창당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는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가 각각 경남도지사, 충남도지사,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노 세력의 부활을 신고했다. 같은 해 8월 문성근은 ‘야권연대’를 주창하면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은 2011년 9월에는 더 많은 친노 인사들을 포괄하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정치 조직으로 발전하고, 같은 해 12월 혁신과 통합은 한국노총을 끌어들이며 민주당과 통합하여 민주통합당을 발족시켰다. 모바일 투표를 이용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친노 세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1석을 차지했다.

다른 한편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민주통합당 출범 당시 통합진보당도 통합의 대상이었으나 당내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단일 후보를 내는 ‘야권연대’를 이루었다.

민주통합당의 당권을 장악한 친노 세력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총선을 통해 원내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당내 제1세력이 되었다. 현재로서 공천 과정의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외부로 알려진 지역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친노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가 각각 절반 정도이다. 지역 공천자와 비례대표 추천자 중에도 친노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다수이다.³⁾

실제 총선에서 친노 후보 다수가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당선됨으로써 친

2)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웹사이트의 연혁 참조.

3) 정영모가 뉴데일리에 기고한 2012년 3월 26일자 기사는 노무현 재단 인사들이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 추천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의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노무현 재단 인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친노 세력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노 세력이 정치적으로 부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유인태, 전해철, 박남춘 등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비서관과 친노 성향의 옛 열린우리당 '486' 후보인 이인영, 우상호, 정청래 등 10명 이상이 당선되었다. 또한 부산에서 문재인, 세종특별시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거기에 한명숙, 김현 등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친노계는 최소 27명에서 최대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일요서울, 2012/5/14).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서거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노무현'이라는 강력한 구심점과 인터넷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인터넷과 SNS는 15~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충성도 높고 활동적인 친노 지지자들에게 '요새'를 제공하였다.⁴⁾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는 집단 내부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 적합하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취약하다. 또한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다음 아고라'에서는 집단적 힘이 과시되기 어렵다. 트위터에서는 그러한 단점이 극복될 수 있다. 친노 지지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사용자들이 있는 트위터에서는 팔로잉과 RT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결합되어 있어 신속한 정보 확산과 반응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국민경선이라는 제도는 조직과 동원에 뛰어난 친노 세력의 재등장에 제도적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손쉽게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이나 동원 능력을 갖지 못한 기존의 당 중진이나 활동적인 당원들의 영향력은 일거에 제거되었고 그 자리는 친노 세력으로 채워졌다. 친노 세력만큼 충성스런 지지자를 갖지 못하는데다, '야권연대', '국민참여'라는 명분에서 밀린 당내 기존 세력들은 친노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친노 세력의 부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실상 친노 집단의 재등장 과정은 노무현이라는 비주류의 정치인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02년 대선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영민, 2003). 그것은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은 채 명분, 충성심, 그리고 동원만으로 추진될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광신적 집단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트위터는 그러한 준 종교집단이 등지를 트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의제 설정의 개방: 선거 쟁점의 착종(錯綜)

현 정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는 남북한 관계 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권력형 부패, 한미 FTA 협정, 경제의 이중 구조화(대기업에 대한 통제, 중소기업

4) 2012년 3월말 현재 각 웹사이트와 트위터에서 확인한 노사모 회원수 12만3천명,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회원수 18만6천명, 문성근, 문재인 트위터 팔로워수 각 22만명으로부터 추정함.

의 보호), 외국 투기자본 규제, 국영기업 민영화, 4대강 사업,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개입, 빈부격차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등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어 현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 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야권의 ‘심판’과 여당의 ‘방어’가 마주치는 선거가 되어야 했는데, 선거는 중간 중간에 튀어나온 민주-반민주 쟁점과 도덕성 논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정 수행의 평가 대상인 집권당은 지난 1월 당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총선의 ‘심판’에 대비했다. 연이은 권력형 비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당 이미지가 실추되자 신속하게 당명을 바꾸었고 총선에서 여당의 전략은 철저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대안적 세력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당은 거의 대선을 치르듯이 총선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시즌 초기 민주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적 접근을 하는 듯 보였으나 당 밖의 친노 세력과의 통합, 민주노동당과의 ‘야권 연대’의 창출, 무리한 후보 공천 등에 힘을 빼면서 정책 비판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실제로 여당인 ‘새누리당’만큼도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했다.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정당들이 선거 아젠다를 선도하지 못하고 언론 매체에 끌려 다녔다는 점이다. 그런데 공영방송들이 ‘공영성’ 문제를 둘러싼 장기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선거 정보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요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친여당적 입장에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친야당적 입장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했다. 유력 신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극적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당파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프레임’과 ‘아젠다’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다(오마이뉴스, 2012/4/15). 그런데 이중 친여당지인 조선(184만), 중앙(131만), 동아(129만)의 발행부수의 합은 4백44만이며, 친야당지인 경향(29만)과 한겨레(28만)의 발행부수의 합은 57만이다(동아 Economy, 2010/11/29). 즉, 신문은 압도적으로 친여당적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 초기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려고 했다(일요서울, 2012/2/1; 이데일리, 2012/2/14; 연합뉴스, 2012/3/16).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실제 선거기간 중 그러한 민주통합당의 의제는 친여적 일간지는 물론이고 친야적 일간지의 지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트위터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표 2> 인기 RT 트윗과 주요 일간지들의 머릿기사 소재

	트위터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3/29	문대성 논문표절, MBC 파업, NYT 위안부 광고	신용카드 교체 대란	소년원 문제	정당 정책 분석	수입 유모차 가격	선관위 디도스 특검
3/30	문지마 폭행 경고, 불법사찰	불법집회 관련 설문	안철수 야권인사 지지	미래형 직업을 찾아서	YTN 사장 문제	불법사찰
3/31	만우절 장난전화,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권재진 사퇴 요구	불법사찰
4/2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4/3	박원순 지지, 곽노현 공판, 야권에 대한 비판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불법사찰
4/4	투표 독려, 불법사찰 박근혜에 대한 비판	탈북자 귀국	오글랜드권 총난사	탈북자 귀국	공약 분석	불법사찰
4/5	여당 비판과 투표 독려, 불법사찰, 지자체 재정위기	지자체 재정위기	김용민	북한 잠수함	불법사찰	불법사찰
4/6	야권 지지와 투표독려, 김용민, 나꼼수	지자체 재정위기	김용민	수원살인사 건	불법사찰	현정부비판
4/7	교과서 문제, 6호선 기관사의 발언, 여당 비판과 투표독려	김용민	김용민	김용민	수원살인사건	선거분석
4/9	투표독려, 수원살인사건	수원살인사건	수원살인사건	김용민	수원살인사건	선거분석
4/10	여당비판과 투표독려, 김용민, 투표독려	수원살인사건	수원살인사건	수원살인사 건	선거분석	수원살인사 건

공식적인 선거 유세가 허용된 다음날인 3월 30일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표 1>에서 보듯이 며칠 동안 이 뉴스는 주요 일간지는 물론이고 SNS에서 최대의 관심을 받는 의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주요 일간지에서는 문건의 진실성 공방으로 말미암아 불법사찰의 핵심적 이슈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는 선거 의제로서의 수명을 다 했다. 이는 트위터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4월 6일 이후에 불법사찰은 주요 RT 트윗에 포함되지 못했다.

선거 유세 기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친여 일간지인 ‘조중동’은 소위 북풍 이슈와 김용민 후보의 도덕성을 의제로 설정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4월 10일에는 경향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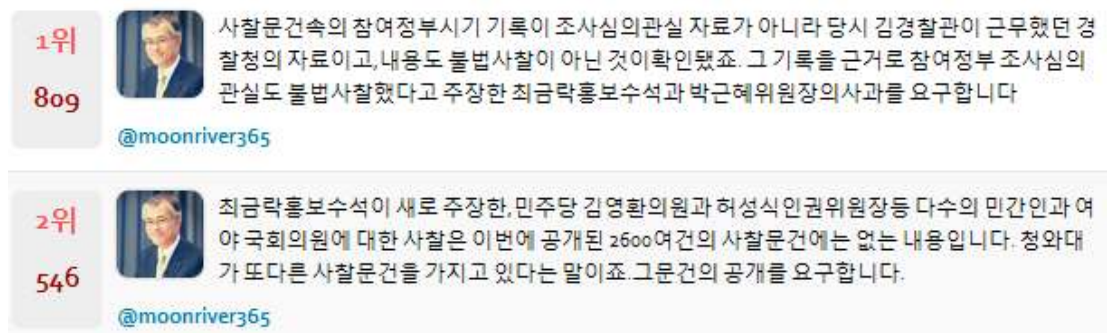
문만 제외하고 네 신문의 1면 머릿기사는 선거 보도가 아닌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차지했다.

트위터의 인기 RT를 보면, 주요 일간지의 머릿기사와 부분적으로 공명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머릿 기사를 따라가지는 않았다.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투표 독려, 나꼼수, 여당 비판, 야권 지지 등 주요 일간지의 머릿기사와는 비교적 독립적인 의제가 등장했다.

그렇다고 트위터에서 생성된 의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정책 비판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인기 RT를 보면 경제민주화, 한미FTA, 보편적 복지,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주제가 빠져있다. 독립적인 의제 설정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의제의 내용은 투표 독려와 같은 감각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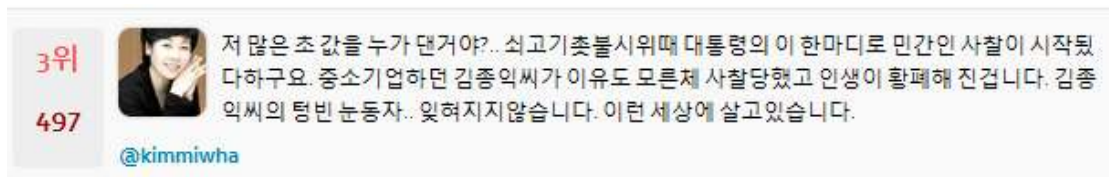
트위터에서는 여야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한 공격만 난무했을 뿐 정책 대안을 둘러싼 포지티브한 토론이 없었다. 140자라는 트윗의 길이 제한에,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타임라인에서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뉴스 기사나 상세한 주장이 담긴 블로그 링크를 트윗할 수는 있지만 토론하기에는 크게 불편하다. 정책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트위터는 다음 아고라와 같은 전자게시판보다 훨씬 취약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2> 불법사찰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트윗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그림 2>와 같이 비교적 논리적인 트윗을 올렸지만 여전히 직관적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동일한 주제에 관한 인기 트윗들도 감정적 호소에 그치고 있다(<그림 3>). 이러한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는 메시지 전달에 논리적이기 보다 감각적인 표현이 효과적이다. 때문에 정치와 같이 진영간의 대립이 분명한 영역의 경우 트위터와 같은 매체는 공론장이 아니라 ‘전쟁터’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림 3>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방송인 김미화의 트윗



트위터는 선거의 아젠다를 국정 비판으로 돌려놓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트위터는 후보자 개인의 발언이나 신상을 둘러싼 도덕적 비판이나 감정적 대응을 부각시킴으로써 선거 쟁점을 착종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트위터의 특성은 선거 쟁점만 착종시킨 것이 아니라 선거를 넘어서 논의되어야 할 사회적 현안들을 당파적 쟁점들은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뒤섞어 버림으로써 사회적 현안들이 '선거적' 쟁점으로 전락해 버렸다. 사회적 현안이 선거적 쟁점이 되면 논의가 힘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가 끝나면 사회적 관심도 사라져 버리는 단점이 있다.

4대강 사업의 마무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추진,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FTA, 국영기업 민영화 등은 찬성과 반대라는 선거판 이슈 투쟁으로 끝낼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서 이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트위터에서 어떤 사건이 쟁점화되면 대중매체가 그것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다든지 당국이 대책 수립에 나서는 방식으로 트위터는 어느 정도의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트위터의 의제 설정이 작동하는 이슈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트윗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한 채 타임라인에서 떠내려간다. 선거 기간과 같이 정치적 발언이 폭증하는 시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트위터는 복잡한 국가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한 현안들은 폭로, 마녀사냥, 패러디, 풍자 등과 같은 감각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신에 그것들은 공영방송이나 정론지(quality paper), 혹은 치밀하고 차분한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정치적 발언의 대중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SNS는 트위터이다.⁵⁾ 여야 정치인 모두 트위터를

5) 페이스북도 선거에 활용되었지만 트위터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소수의 후보들은 페이스북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형식적인 수준의 운영을 넘지 못했다. 선거기간 중 페이스북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정치인은 문재인 후보이다. 그의 페이지

적극 활용하였으며, 영향력이 높은 트위터 사용자들 다수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영향력이 큰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 포털사이트들이나 정당 홈페이지는 실시간으로 트윗을 중계하고 트윗 분석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올리는 트윗과 그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은 트위터 외부에 까지 전달되었다.

<표 3> 트위터 영향력 순위와 19대 총선에서의 정치적 발언

순위	이름	팔로워 수	정치적 발언
1	이외수	1,353,606	활발(야당 성향)
2	김용민	324,681	활발(야당 성향)
3	강풀	459,501	활발(야당 성향)
4	진중권	240,232	활발(야당 성향)
5	조국	328,973	활발(야당 성향)
6	좋은글 봇	99,330	--
7	공지영	430,119	활발(야당 성향)
8	이태성(배우)	39,618	--
9	허재현(한겨레 기자)	95,420	활발(야당 성향)
10	박원순	499,586	활발(야당 성향)
11	MBC노동조합	59,394	활발(야당 성향)
12	서영석(정치평론가)	54,985	활발(야당 성향)
13	chateadicimo	121,271	--
14	레인메이커	37,407	활발(야당 성향)
15	samsung	116,487	--
16	Sung Je Kim	96,581	--
17	탁현민	127,668	활발(야당 성향)
18	olleh	102,570	--
19	김세균	11,958	활발(야당 성향)
20	주진우	332,183	활발(야당 성향)

출처: koreantweeters.com. '영향력' 순위란 코리안트위터가 자체 개발한 지표로 사용자가 얼마나 다른 사용자와 많이 대화하는가를 보여주는데, RT, @mention, listed, 트윗을 가지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산출된다고 한다.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다고 영향력 순위가 높지는 않다.

에는 1만1천명 정도의 회원(likers)이 있으며, 일정에 관한 소식,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일상 이야기 등이 꾸준히 올라왔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페이지도 약 7~8천명의 회원이 있고 비교적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왔다. 그러나 가장 활발하게 페이스북을 사용한 정치인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이용은, 약 2천7백만 명의 회원을 지닌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정치인들의 페이지가 유권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채널로 이용되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트위터가 선거 열전의 중심 무대가 되면서 다음 아고라와 같은 토론사이트는 예전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는 매우 다른 성격의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대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기기와 결합된 트위터는 다음 아고라에 비해 훨씬 다이내믹하다. 트위터는 반응이 즉각적이며 확산 속도가 놀랍게 빠르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타임라인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고, 모든 트윗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면서 잡다한 내용이 뒤섞여 소비된다. 또한 트윗 길이는 140자 제한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모든 트윗은 공평한 노출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길이 제한은 논리적 의견 제시를 어렵게 하고, 트윗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해시 코드를 이용해 동일 쟁점이나 주제에 관한 느슨한 형태의 토론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주제에 관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트윗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이슈에 관한 차분하고 집중적인 논쟁이나 토론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고라와 달리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명사 사용자들의 영향은 큰 반면 일반 사용자들이 주목을 받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이다. 일반 사용자들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역할은 RT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 사용자들의 RT는 마치 과거에 시내 중심에서 자신의 존평을 소리치며 신문의 호외지를 팔던 판매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준 익명적이고 개방적인 다음 아고라에서는 비록 상호비방과 악성 댓글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주요 현안들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쟁점들에 관해 대단히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포스팅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반면에 트위터에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난다. 논쟁이나 토론의 공간이기 보다는 트윗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전투' 공간이다.

트위터의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 반면, 비교적 소수의 명사들을 제외한 시민들의 발언은 '정보과잉' 속에 묻혀버린다. 온갖 유형과 수준의 발언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마구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개인적 꾸밈, 농담, 소문, 허위 정보, 역정보, 비난 등이 진지한 주장, 제안, 비판 등과 뒤섞여 버린다. 글자수 제한 외에 트위팅에 규범이 없고, 대면적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인터넷의 다른 영역처럼 트위터에도 자체 정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것은 트위터의 휘발성을 고려할 때 작동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러한 트위터의 속성을 이용해 이슈에 대한 '물타기'나 여론 조작이 시도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을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 경우 거짓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으며, 거꾸로 어떤 비판도 모두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갈 수 있다.

3. 토론: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19대 총선의 매체 지형에 대한 분석은 트위터가 민주적 과정(democratic process)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점에서 트위터는 민주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트위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점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직 사용자가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트위터는 그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둘째, 트위터는 대안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주류(main stream) 매체에서 받아주지 않는 소수나 진보의 주장이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팟캐스트나 유튜브의 콘텐츠, 인터넷신문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친노 세력의 복귀에서 보듯이 트위터는 대안적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트위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대안적 정치세력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세 가지 점에서 민주적 과정을 변질시킨다. 무엇보다 트위터는 선거 쟁점을 착종시키고 모든 사회적 논의를 선거 쟁점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트위터에서 대중매체로부터 독립적인 의제설정이 가능하지만 당파적 갈등이 현재화된 선거 국면에서 제대로 작동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 집단을 치열한 경쟁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집단내 내부 비판을 어렵게 만든다. 집단 내 다른 목소리는 이적 행위처럼 비난받게 된다. 그리고 연예인, 비평가, 작가, 유명 정치인 등 소위 명사들의 주장은 과도하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반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9대 총선 과정에 미친 트위터 영향을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가 민주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긍정적 역할은 살리면서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모습의 온라인 공중대화(public dialogue)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트위터에서의 공중대화는 마이클 가디너(Gardiner, 2004)가 명명한 ‘괴기적 심포지엄(grotesque symposium)’에 가깝다. 그것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발언할 수 있으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까지 폭넓게 허용된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표현, 논쟁, 전략, 술수 등이 모두 용인되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된다.

어떤 전문가들은 트위터를 일방향적 매체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방향성이 높은 SNS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독백(monologue)의 공간은 아니다. 미하일 바흐찐에 의하면 독백은 타자의 세계 인식과 목소리를 대등하게 인정하지 않는다(Holquist, 1990). 트위터에 이러한 의미의 독백은 없다. 타자성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을 뿐이다. 트윗을 올릴 때는 누구나 타자의 반응을 기대하고, 사용자들은 트윗을 읽고 RT, 답글, 그리고 쪽지를 통하여 반응하곤 한다.

트위터의 취약점은 공동체성이다. 공동체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사용자들이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부족하다. 트위터에서 집단 활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타임라인이라는 개별적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공중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서는 집단이 대단히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당파적 활동에는 적합하지만 사회 전체의 통합된 정체성을 제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위터는 카스 선스타인(Sunstein, 2007)이 말한 일반-이익 매체(general-interest intermediary)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트위터에서는 우연한 마주침(serendipity)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 대체로 자신이 선호하는 명사나 집단의 계정만을 팔로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는 반향실(echo-chamber)이 넘쳐나고, 다양한 집단들의 '요새'가 구축된다(Sunstein, 2009).

그렇다고 트위터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트위터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보다 공동체성이 높은 SNS나 사이트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파성을 넘어서 공공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SNS 중 트위터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트위터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닌 페이스북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잘 이용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는 잠재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신뢰할만한 범사회적 공론장의 부재이다. 하버마스가 주창하는 이상적 발화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당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정치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공영성을 제대로 확보한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사이트가 포스팅과 댓글 규칙을 잘 관리하고 모바일 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논쟁 뿐 아니라 토론이나 다이어로그(dialogue)와 같은 공중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지금은 마치 논쟁만이 공적 대화의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논쟁은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 사회에 내재한 상이한 입장과 견해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데 논쟁만한 대화 형식이 없다. 또한 논쟁은 논리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쟁은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화에서 승리(혹은 설득)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찬반의 당파성을 띄게 되고 상대의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어 공격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우며 상호 이해와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쟁점이 실제의 차이보다 훨씬 단순화되고 과장되며 감정적인 응어리까지 남

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중대화를 하는데 있어 논쟁뿐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상호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토론, 나아가 참가자들의 기여를 최대한 끌어내면서 교육(혹은 학습) 효과를 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다이어로그 방식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분석이 지닌 이론적 함축성을 살펴보자. 우선 트위터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를 증가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 19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도권 외의 20~30대 유권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치참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매체가 지닌 영향을 지나치게 높이 예상하면 기술결정론으로 가게 된다. 아직 전국에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지 못한 트위터의 경우 이 정도의 결과라면 그것의 영향을 어느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SNS가 집단행동을 일으키기 쉽게 해준다는 이론은 19대 총선에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친노 세력의 정치적 부활은 SNS와 휴대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 토론이 배제된 정치 집단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념해서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트위터가 선거에서 대안적 의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비판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어느 정도 대안적 의제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선거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책 검증으로까지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SNS가 그러리라 예단할 수는 없다. 예컨대 페이스북 페이지라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SNS가 정치토론을 강화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유보적이다. 트위터 덕분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정치적 토론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트위터의 속성상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 비논리적인 공격, 감정적 자극 등이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위터를 통한 수준높은 정치 토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SNS에서도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행동유도성(affordance)이나 상황정의를 잘 주어지는 SNS라면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마무리하면서

본 논고에서는 선거와 반부패의 문제를 ‘공정선거’라는 통상적인 의미보다 넓은 ‘민주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민주적 과정으로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 수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주요 대상은 정권일 수도 있고 의원 개인일 수도 있다. SNS, 특별히 트위터가 이번 선거를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저해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초점이었다.

명암의 비중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마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민주적 과정의 구현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나꼼수’가 언론을 대신할 수 없고, 트위터가 공론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난장적 성격을 가진 매체들이 민주적 과정의 구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별도의 공론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교태. 2002. 웹사이트 캠페인이 기존 뉴스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에 미치는 영향: 의제설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46~75쪽.
- 김경미 (2005). 인터넷이 집합행동에 미치는 영향: ‘2002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집 1호, 183~211.
-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과 역의제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쪽.
- 김은미, 이준웅 (2004).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 관한 소고, 「2004년 한국언론학회 전환기의 한국언론」(117~147쪽). 한국언론학회 학술발표자료집.
- 김종길. 2008. 「사이버 트렌드 2.0」. 서울: 집문당.
- 김학수·오연호. 2003. 인터넷신문을 통한 일반시민의 의제수립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60~81쪽.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1호, 315~334.
- 윤영민. 2003. 사이버 선거운동의 분석, 「사이버공간의 사회」 제11장, 281~313쪽.
- 윤영민. 2005. 전자선거: 민주적 과정의 재설계, 「전자선거 E-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7~185쪽.

- 윤태일·심재철. 2003. 인터넷 웹사이트의 의제설정 효과.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194~219쪽.
- 이항우 (2005). 경합적 다원주의와 온라인 사회·정치토론. 「경제와 사회」, 겨울호(통권 제68호), 189~212.
- 조희정, 이상돈. 2011. 네트워크 사회의 사회적 개인의 발현과 공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제제안, 의제연결, 집단화 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9권 제2호, 231~262쪽.

- Benkler, Yochai.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ardiner, Michael E. 2004. "Wild public and grotesque symposiums: Habermas and Bakhtin on dialogue, everyday life and the public sphere," edited by Crossley, Nick and John Michael Roberts, *After Habermas: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Pp.28~48.
- Holquist, Michael. 1990.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 London: Routledge.
- Iyengar, Shanto. 2005. "Speaking of Values: The Framing of American Politics," *The Forum*, Vol. 3, No. 3. Pp.1~8.
- Shaw, D. L. and McCombs, M. 1977.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Issues: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St. Paul: West.
- Mossberger, Karen, Tolbert, Caroline J. and McNeal, Ramona S. (2008).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New York: The Penguin Press.
- Shirky, Clay (2010). *Cognitive Surplus: Creativity and Generosity in a Connected Ag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Smith, Aaron & Schlozman, Kay L. & Verba, Sidney & Brady, Henry (2009). *The Internet and Civic Engagement*.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www.pewinternet.org/reports/2009/15--The-Internet-and-Civic-Engagement.aspx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stein, Cass.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 2012. 05. 23

수정일자 : 2012. 05. 19

게재일자 : 2012. 05. 25

국문초록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SNS: 그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윤영민(한양대)

19대 총선에서 SNS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채널로 자리잡았다. 이 논문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의 등장이 지닌 정치적 함축성을 해독해보려는 시도이다. 과연 그것은 낙관론자의 예상처럼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비관론자의 전망처럼 중우민주주의로의 퇴보를 초래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9대 총선의 경험은 어느 쪽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위터는 시민들의 공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키워주며, 나아가 대안적 정치세력의 등장을 쉽게 해주었다. 반면에 트위터는 선거 쟁점을 착종시키고 정치에 대한 명사들의 영향을 강화시켰다. 선거에서 트위터는 공론장이라기보다 난장이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발견이다.

주제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SNS, 트위터, 민주주의, 공론장, 카니발리스크, 정치, 선거, 투표